

학술특집

학술정책 공동설문조사를 마치고

실패한 학술정책, 대안 모색하자

‘학문의 위기’ 담론은 이제 식상할 만큼 오랜 기간 동안 논란이 돼 왔다. 하지만 위기 상황을 타개할 만한 특단의 대책은 도입되지 않았다. 인문·사회과학의 위기 상황은 시장 에 의해 촉발됐으며, 국가는 일관된 경제주의 관점과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시장의 압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 결과 인문과학의 위기, 사회과학의 위기 상황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물론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학술진흥재단을 중심으로 학술연구 지원 사업이 예산을 확대하고 연구과제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더해가며 일정정도 제도화하는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학술단체협의회는 그러한 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기초해 학술정책의 발전을 위해 비판과 함께 정책 대안들을 꾸준히 제시해왔다. 하지만 학술정책의 진보는 계속되지 않았다. 특히, 한국연구재단(이하 연구재단)의 출범과 함께 학술정책의 퇴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학술단체협의회는 산하 학술단체들과 함께 인문·사회과학 위기의 실체를 확인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을 수행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그 첫 번째 사업으로 <교수신문>과 함께 인문·사회과학 분야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황을 파악하고자 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인문·사회과학은 위기이며 정부의 학술정책은 학문의 위기 상황을 타개할 의지도 역량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년 상반기 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학문단장들의 집단사퇴 사태는 연구재단이 인문·사회과학 위기를 확대재생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기 해결능력은 고사하고 자정기능조차 지니지 못한 것으로 의심받기에 충분했다. “독립성과 자율성이 가장 중요한데, 아직까지 교과부에서 연구재단을 통제하려는 분위기가 있다”, “무조건 조직의 논리를 따르라는 말을 공개적 자리에서 직접 들었다”, “연구재단이 조폭 집단처럼 느껴질 정도였다”란 전 학문단장들의 증언은 연구재단이 학술연구활동에 대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통제 기구에 불과하다는 연구자들의 평가를 확인해 줬다.

연구재단에 대한 연구자들 불신 깊이

인문·사회과학 연구자들은 연구지원 사업을 통해 정부의 학술정책을 집행하는 연구재단을 시장의 암시와 국가권력의 지시에 홀린 선무당 정도로 평가절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연구자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연구재단은 물론 연구지원 사업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구재단이 시장이나 국가권력보다 공익을 우선시하고, 단기적 성과가 아니라 학문의 장기적 발전 전망에 입각해 학술정책을 수립·집행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연구자들의 몫이다.

향후 일련의 기획칼럼들을 통해 인문·사회과학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바람직한 학술정책 대안들이 논의될 것인바, 여기



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다양한 학문적·이념적 관점의 인문·사회과학 연구자들이 지배권을 공유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연구재단은 국가권력의 개입을 차단하고 자율성을 확보하며 학문발전을 통한 공익 봉사에 매진할 수 있고, 학술활동에 대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통제기구라는 오해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연구지원 개인 단위로 전환돼야

둘째, 인문·사회과학 연구는 대규모 설문조사연구 혹은 비교사회연구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개인 단위로 연구가 수행되기 때문에 내실 있는 연구를 제약하고 자원 낭비를 야기하는 연구지원사업의 대형화를 지양하고 개인과제 지원 중심으로 전환되 안정적 연구를 위해 연구기간을 장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비정규직 교수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교육·연구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비정규직 교수들이 자신의 전공영역이나 연구관심보다 연구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정규직 교수들에 의해 부과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은 비정규직 교수들이 지닌 연구역량을 개발하고 사회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적절한 방식이 아니다. 비정규직 교수들이 연구관심과 연구역량을 지닌 주제를 연구해 연구논문을 발표하면 연구재단이 사후적으로 지원하거나 매년 하나의 과제 수행을 전제로 현재 연구재단이 지급하는 수준의 1년 연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교육·연구 여건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들을 도입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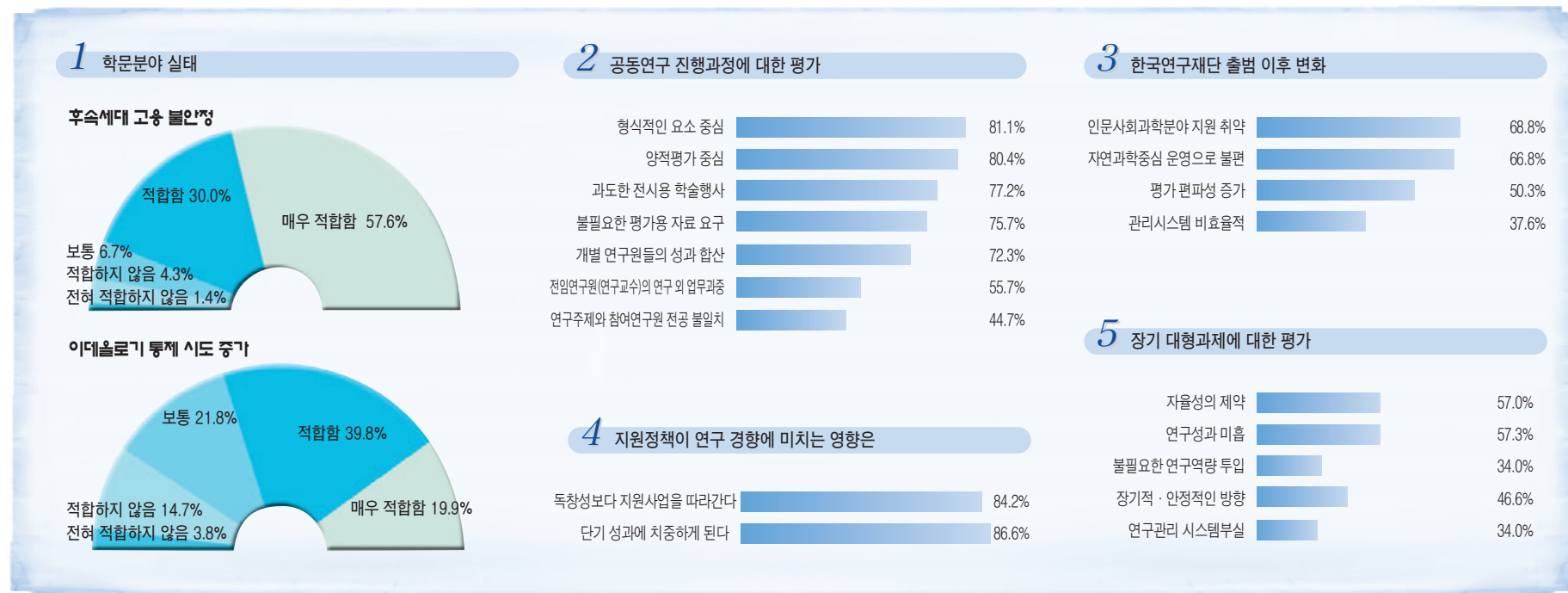
넷째, 인문·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는 다른 학문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학문 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 심사, 평가 과정도 학문 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체계 속에서 진행돼야 한다. 1년여에 걸친 연구재단 경험은 그러한 우려를 확인해 줬다는 점에서 더 늦기 전에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학술연구 활동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수립하거나 최소한 인문·사회과학 부문을 분리해 예산 및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조준돈 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

필자는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박사를 했다. 주요 저서로는 『برا질에서 진보의 길을 묻는다』 등이 있다. 현재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학술단체협의회·<교수신문> ‘인문사회과학 학술정책’ 공동 설문조사

‘비학술적 동기’에서 연구에 참여…공동연구·대형과제 실패



● **조사 개요**

· 대상 : 학술단체협의회 회원 249명, <교수신문> 필자 등 100명 (회신 212명)

· 조사방법 : 이메일 설문조사

· 조사기간 : 2010년 5월 27일(목)~ 7월 2일(금)

· 진행·분석 : 학단협 학술정책연구팀, 우주영 기자

● **설문 응답자 분포**

· 나이

30대 19.8%(42명)
40대 46.6%(103명)
50대 27.8%(59명)
60대 2.4%(5명)
66세 이상 1.4%(3명)

· 전공

인문학 49.8%(104명)
사회과학 50.2%(105명)

· 최종 학위 취득 국가

한국 76.2%(157명)
미국 11.2%(23명)
독일 7.3%(15명)
영국 2.9%(6명)
기타 2.5%(5명)

· 직급

정교수 29.8%(62명)
부교수 15.4%(32명)
조교수/전임강사 12.5%(26명)
비전임 32.5%(69명)
기타 9%(19명)

· 주요 연구형태

단독연구 30.5%(58명)
공동연구 69.5%(132명)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정책이 실패에 가깝다는 연구자들의 진단은 연구지원 규모와 심사, 연구자들의 고용 불안정 등 곳곳에서 드러났다. 학술단체협의회(상임대표 조준돈 가톨릭대)와 <교수신문>이 대학의 전임·비전임 교수 349명(회신 2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현 학술정책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자들의 부정적인 평가는 51.1%로 긍정적인 평가(26.4%)에 비해 두 배에 달했다. 특히 학문 후속세대의 고용 불안정 문제에는 응답자 중 87.6%가 동의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정부의 학술정책 실패는 연구지원 규모의 대형화와 연구과제 심사과정 평가에서도 잘 나타났다. 공동연구 및 대형연구 사업은 연구 주제와 전공 불일치, 연구자 개인의 연구 자율성 제약으로 인해 내실 있는 연구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연구자의 연구 역량 개발에도 실패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평가점수를 의식한 전시형 학술행사 남발로 연구비 규모에 걸맞은 연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연구자들은 한국연구재단의 공동 연구과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질적 평가 대신 양적 평가가 중심’(80.4%)이 돼 실질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을 뿐 아니라 결과 보고서 분량 등 ‘연구결과의 평가에 형식적인 요소가 많이 고려된다’(80.1%)는 지적이 제기됐다.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한 전시형 학술행사가 지나치다’(77.2%), ‘연구 결과물은 공동연구의 성과라기보다 개별 연구원들의 성과를 모아 놓은 것’(72.3%)이란 지적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공감을 나타냈다. ‘전임 교수의 연구 외 업무가 과중하다’(55.7%), ‘연구주제와 참여 연구원의 전공이 맞지 않는다’(44.7%)는 의견도 이어졌다.

72.3% “공동연구, 개별성공에 불과”

한국연구재단이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학술활동에 대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통제

기구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응답자 중 59.7%의 연구자들은 학술활동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통제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 연구과제 심사 및 선정 과정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통제를 관철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지난해 중앙대 독일연구소와 상지대 등 3개 대학의 민주사회정책연구소가 잇따라 HK지원사업 해외지역연구 분야와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 최종심사에서 탈락한 것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자들은 순수한 학술적 동기보다 비학술적 동기로 연구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향이 높았다. 연구과제 참여 동기를 연구주제에 대한 관심으로 참여하는 ‘학술적 동기’와 생계비 획득, 타인의 일자리 마련, 연구업적 평가 대비, 학교 측 요구 등 ‘비학술적 동기’로 구분해 보면, 자유로운 순수 학술적 동기에서 참여하는 비율은 12.5%에 불과했다. 반면 순수·비학술적 동기는 38.5%로서 순수·학술적 동기의 세 배가 넘었고, 학술적·비학술적 동기가 동시에 작용한 사례는 4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연구자들은 비전임 교원들의 연구·교육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고용불안정’(93.3%)과 ‘교원지위 불안정’(91.3%)으로 인해 연구가 질적으로 저하되고 있다는 데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동의했다. ‘연구관심과 맞지 않은 연구 프로젝트’(80.1%)에 참여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96.2%), ‘공동과제 보다 개인 과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84.1%)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가 학술정책을 통해 인문·사회과학의 위기를 타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한국연구재단으로 통합되면서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인식도 컸다. 한국연구재단 출범 이후 인문·사회과학 학술정책 변화를 부정

연구자들은 한국연구재단이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학술활동에 대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통제기구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했다.

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은 55.9%에 달했고, 긍정적인 평가는 6.3%에 불과했다.

“연구재단 통합이후 학술정책 더 나빠져”

연구자들은 ‘과거보다 인문사회과학 분야 지원이 취약해 졌다’(68.8%)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자연과학 중심으로 운영돼 과거보다 불편해졌다’는 의견이 66.8%로 뒤를 이었으며, ‘심사와 평가의 편파성 증가’(50.3%), ‘비효율적인 심사, 관리시스템’(37.6%)도 문제로 제기됐다. 한국연구재단이 이공계중심 정책기관으로 알려진 미국 NSF를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출범 이전부터 ‘인문·사회과학을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이에 대해 조준돈 교수는 “한국연구재단 통합 자체에서 비롯된 결과라기 보다 국가권력 및 한국연구재단 설립과 임원진 선임 등 지배구조 변화의 결과로서 심사과정의 불공정성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우주영 기자 realcosmos@kyosu.net

學而思

지리산에서 영원한 이상향을 찾다



홍영기 순천대 지리산문화연구원 원장

필자는 서강대에서 박사를 했다. 주요 논문으로는 ‘한말 경기북부지방의 의병활동과 김구식’, 저서로는 ‘한말 후기의병’ 등이 있다. 사학과 교수로 있다.

5년 전 지리산 실상사에 주석하던 도병 스텀은 ‘오늘 우리들에게 ‘지리산’ 그는 누구인가? (중략) 반드시 우리 모두 돌아가야 할 생명의 고향, 역사의 고향, 삶의 고향같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남북의 분단으로 백두산이나 금강산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처지의 우리로서는 한번쯤 꼭 가고픈 산이 바로 지리산일 것이다. 때문에 사람들은 먼 길 마다 하지 않고 밤새 달려와 새벽과 함께 걷기 시작한다. 노고단에서 천왕봉까지 하룻길로 달리다시피 걷고서는 의무를 다한 듯 편한 마음으로 제각각 왔던 길로 되돌아간다. 최근에는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서처럼 느긋하게 지리산 둘레길의 구간구간을 걸으며 지나간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기도 한다.

하긴 최근 일만도 아니다. 고려 말의 이인로는 청학동을 찾았고, 조선 중기의 남명 조식은 아예 천왕봉 자락에서 평생을 보내는 등 수많은 사람들이 지리산을 찾은 흔적을 글로 남겼다. 나 역시 대학시절의 지리산 종주를 잊지 못한다. 한국화의 화폭에 담긴仙境이 그저 그림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리산 종주를 통해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세파에 시달리며 문득문득 지리산을 떠올렸지만 그저 마음 속 고향일 뿐이었다. 그러다가 지리산이 가까운 대학에 부임하게 되면서 연구의 첫걸음이 시작됐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왜 지리산을 찾는 것일까. 어쩌면 그 대답은 평생을 지리산에서 보낸 남명 조식의 간명한 말에 정리돼 있을지 모른다. 그는 ‘산을 보고 물을 보며,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본다(看山 看水 看人 看世)’고 했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지시하는 화두다. 하지만 나 홀로 관조는 가능할까 정 연구를 하기에는 힘겨운 주제였다. 마침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사업에 선정됨으로써 학문적 도반이 많아졌고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명산문화에 주목하게 됐다.

사실 우리나라는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로 구성돼 있지만 아직까지 산지에 대한 인문적 고찰은커녕 학제적인 연구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 중에 지리산은 신라의 五藏制 성립 이래 현재까지 南嶽의 위상을 가진 명산 문화를 대표하는 산이다. 지리산은 박혁거세와 왕건의 어머니를 노고단과 천왕봉에 각각

우리나라는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로 구성돼 있지만 산지에 대한 인문적 고찰은커녕 학제적 연구도 부족하다.

모시면서 성모신앙의 성지가 됐고, 산신이 다스리는 땅으로 숭배의 대상이 됐다. 그러한 역사적 배경이 작용해 지리산은 현재까지 어머니의 산으로 인식돼 왔다.

또한 지리산권 문화는 지리적요소 영호남을 아우른다. 상호 이질적인 문화의 융합을 통해 형성되고 전개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그 결과 고대에서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지리산권에서 발아하거나 성장한 문화는 그 폭이

매우 넓고 다양했다. 토속적인 고유 신앙에서 佛家·儒家·仙家 및 산흥종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상과 이념이 지리산 품속에서 배태되고 성장했으며, 근대 격변기에는 혁신적인 사상의 주 무대가 되기도 했다. 이렇듯 지리산권 문화는 고유 신앙과 함께 유불선 등의 다양한 종교와 사상이 어우러지고 융합한 문화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리산권 문화가 가진 또 다른 특징은 혁신과 저항을 통해 나타나는 실천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려 말의 왜구침입과 임진왜란에 대한 대응과정, 조선 말기의 농민항쟁과 동학농민혁명, 한말 의병항쟁 등에서 단숨에 이론적인 탐구에 몰두하기보다 실천정신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지리산은 한국의 한 지방이지만 수많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사상과 문화가 온축돼 있다.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지방인문학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리산은 동학농민운동과 항일의병의 근거지, 빨치산의 활동무대이기도 했다. 그리고 지리산은 고전문학 분야에서는 수많은 遊山記와 遊山詩, 동편제 판소리를 낳은

배경이 됐고, 현대문학 분야에서는 『토지』, 『태백산맥』, 『지리산』, 『빨치산의 딸』 등 걸출한 작품들의 주요 무대로 등장했다. 이렇듯 지리산은 다양한 인문학적 연구의 소재가 산재해 있는 인문학의 보고이고, 인문학적 상상의 원천이다.

우리는 지혜의 등불을 지피기 위한 도반들의 깊은 사색을 하나로 회통하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멀고도 지난한 작업을 추진해왔다. 지리산의 동쪽과 남쪽에 자리한 두 개의 국립대인 순천대와 경상대의 통합연구단이 지리산을 지붕산아 함께 ‘천일기도’를 끝냈다. 이로써 ‘지리산인문학’의 둘레길 한 구간을 마친 셈이다.

오늘도 歸去來를 꿈꾸는 사람들이나 천왕봉을 찾는 등산객들은 지리산을 ‘무심한 구름이 산허리를 감싸고, 한가로운 새는 제 갈 길을 찾는’ 雲鳥樓로 인식한다. 때문에 우리는 머리로는 조식의 화두를 되뇌고 마음에는 매진 黃玿의 ‘글 아는 사람의 사회적 책무’(難作人間識字人)를 떠올린다. 지리산인문학의 방향이 응축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